

사회

성범죄 교육종사자 퇴출위한 범죄경력 조회

광주·전남 교직원 1400명 동의 안해

장기 출장·소신 거부자 제외해도 수백명 버티고 있는 셈

광주·전남지역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1400여명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과부가 실시한 성범죄 경력조회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유치원·학교·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5~7월 실시한 성범죄 경력 1차 전수조사에서 광주 1055명, 전남 386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광주·전남지역 종사자들

포함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조사대상자 2만2806명 가운데 1055명(4.6%)이, 전남은 4만8386명의 중 386명(0.8%)이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휴가·휴직, 육아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동의서를 내지 못한 종사자도 포함돼 있으나 본인이 조회를 거부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조사완료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는 없었으며, 전남에서는 가능치 공무원 1명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 인사조치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경력조회 당시 조사대상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비추어지겠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던 만큼 소신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유치원·학교·학원 18만9759곳의 종사자 102만6852명 가운데 85.2%인 87만4552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 아래 조회를 마쳤고, 일

부에 대해서는 조회 중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초중고 종사자가 1만556명, 학원·교습소·개인교과교습자가 6904명, 유치원 종사자가 431명이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해당 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5일 광주시청 앞에서 인화학교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책 대신 삽 들고 강제노역했다”

인화학교 졸업생 폭로 ... 20여명에 가짜 졸업장 주기도

대책위 “인화학교 법인인가 취소·관련자 처벌해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의 학생들이 성폭행 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화학교 졸업생 조점례(40)씨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인화학교 학생들은 가방과 책이 아닌 삽을 들고 불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981년 인화학교에 입학한 조씨는 수화로 “공부를 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학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며 “학생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학교와 법인 측은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 물품을 되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가 재학중이던 당시 인화학교는 고등부 비인가시설이었으나 20여명의 학생들에게 가짜 고교 졸업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인화학교를 졸업한 조씨의 한 동기생이 지난해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에 출마하면서 졸업장

을 제출했으나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밝혀졌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이에 인화학교 졸업생 20여명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짜 졸업장을 발급하고, 학생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학교와 법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조씨는 전했다.

인화학교대책위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는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인가를 취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목 인화학교대책위 상임대표

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는 즉발운영과 장애인 당사자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과 제도 때문”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화학교대책위는 인화학교를 운영중인 우석법인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장애인 인권실태 고발을 위해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학생 집단 왕따 교사는 ‘쉬쉬’

광주 모 중학교... 피해학생 대인기피증 앓아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수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데 학교 측이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5일 광주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1학기부터 쉬는 시간, 체육시간 등에 급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했다.

한 학생이 못 움직이게 붙잡으면 다른 학생이 배를 때리고, 목을 팔로 조르는데 괴롭힘을 당했으며 언어폭력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수시로 반복되는 괴롭힘에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됐다고 학부모는 주장했다.

더욱이 담임교사는 A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알고도 정작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사는 지난 1학기에 이미 A군에 대한 급우들의 괴롭힘을 파악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A군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을 뿐 A군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해당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가해 학생의 부모만 부르고 학교측과 피해 학생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과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지검, 선재성 판사 항소

서울고법으로 이전 신청

광주지검은 5일 선재성 부장판사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고법으로 관할이전을 대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이날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서울고법에는 재판부가 많고, 선판사의 선배도 많은 만큼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도록 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투자금이 월급계좌에서 인출됐고, 인터넷 뱅킹을 하는 과정에서 선 판사가 부인 명의의 주식투자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당 배정가격은 다른 투자자보다 3~4배 싸고 수익률은 반대로 훨씬 높았는데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계 허술한 영광원전

밀입국 중국인 잡고보니 해상서 놓친 일당

소형 선박을 타고 영광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3명이 청원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들을 해상에서 포착하고도 원자력발전소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 경계망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영광경찰은 5일 선박을 타고 밀입국한 안모(48)씨 등 중국인 남녀 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수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전날 밤 11시50분경 영광군 흥농읍 계마리 영광원전 인근 해상에서 1t

급 소형 선박을 타고 밀입국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는 조선족 1명도 포함돼 있다.

안씨 등은 전날 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이동하던 중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이 영광 원전 철조망 앞 숲속까지 도착할 때까지 군과 경찰은 검거에 실패, 경계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안씨 등은 군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청원경찰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목욕탕 옷장 전문털이

화순경찰, 30대 구속

화순경찰은 5일 전국의 찜질방과 목욕탕을 돌며 금품을 훔친 김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

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5분경 화순군 화순읍 한 찜질방 탈의실 옷장 문을 두드리고 연 뒤 집안 안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가출 생활비 마련 식당 30여곳 털어

광양경찰, 10대 둘 검거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을 마친 식당 등 30여 곳을 털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5일 삼가읍지지역에서 식당만을 털 정모(17)·강모(17)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달 1일 새벽 1시께 광양시 중앙동 김모(여·49)씨의 식당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중앙동 일대 식당에서 현금과 노트북·카메라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인 또는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식당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잠금장치가 풀린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흡연 ‘빅뱅’ 지드래곤 기소유예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에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으나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한편 이날 YG엔터테인먼트는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

세상의 빛이 다 같은 빛은 아니다.
 “눈에 익숙한 빛”과 “눈에 유익한 빛”은 분명히 다르다

-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제품(PP, 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갈려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뒷밭, 양동시장 외 다수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재국, 오투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i.com